

# 대법원 2024도9353

##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피고인이 ① 피해자에게 사생활에 대한 폭로방송을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자신과 계속 교제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,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데이트 폭행과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, 피해자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, ③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명예훼손)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
대법원 1부(주심 대법관 오경미)는, **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**하여, **①, ② 부분을 유죄로, ③ 부분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**하였음(대법원 2024. 7. 31. 선고 2024도9353 판결)

### 1. 사안의 개요

#### 가. 당사자들의 관계

-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던 사이임

#### 나. 공소사실의 요지

- 강요미수
  - 피고인은 2020. 4.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후, 2020. 5. 1. ~ 5. 2. 피해자에게 '계속 교제를 해 달라,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에 대한

폭로방송을 하겠다'는 등으로 협박하여 자신과 계속 교제하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하였으나,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침

■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<sup>1)</sup> 위반(명예훼손)

- 피고인은 2020. 5. 1.경 피해자의 데이트 폭행과 관련한 제보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약 30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송함
- 피고인은 2020. 5. 2.경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, '①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무시로 정서적인 학대를 받아 데이트폭력을 당했고, ② 피해자가 자신을 만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같으니 카드사용내역을 조사해 달라'라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여 위 회사 윤리경영실 제보게시판에 게시함
-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, ① 데이트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, ②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

■ 정보통신망법 위반

- 피고인은 2020. 5. 4.경 피해자에게 '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'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. 5. 13.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

## 2. 소송경과

### 가. 제1심 ➡ 전부 유죄

-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, 보호관찰, 사회봉사명령 80시간

### 나. 원심 ➡ ① 강요미수, 정보통신망법 위반(명예훼손) 부분 유죄,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 무죄

---

1) 이하 '정보통신망법'

■ 유죄 부분 ⇒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, 보호관찰, 사회봉사명령 120시간

-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협박한 사실이 인정됨
-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욕설 등을 하였을 뿐이고, 데이트 폭력을 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, 이 부분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고,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됨

■ 무죄 부분

-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, 이 사건 각 문언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이지 않음<sup>2)</sup>
  - 이 사건 각 문언은 크게 '미안하다'는 내용, '보고 싶다'는 내용, '음식을 같이 먹자'는 내용, '내가 해결하겠다, 같이 잘 해결하자'는 내용, '걱정된다'는 내용, '연락달라'는 내용 등임
  - 피고인이 이후 3차 폭로방송 예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, 이 부분을 별도의 범행으로 기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, 위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문언이 다르게 해석된다거나 반어적·비유적 의미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문언이 된다고도 보기도 어려움

### 3. 대법원의 판단

#### 가. 쟁점

-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
- 강요미수, 정보통신망법 위반(명예훼손) 부분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

---

2)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문언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고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일어나면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양 죄 사이에 차이가 있음

정당한지 여부

## 나. 판결 결과

▣ 쌍방 상고기각(원심 수긍)

## 다. 판단 내용

▣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(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)

-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

▣ 피고인의 상고이유 관련(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)

-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미수죄, 정보통신망법 위반(명예훼손)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
- 정보통신망법 위반(명예훼손)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